

요 약

▶ SOC 투자 부진으로 2013~2016년간 경제 성장률 3.5%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 할 뿐 아니라 SOC가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복지 자원 마련을 위해 SOC 투자를 축소하고 있음.
- 정부는 SOC 투자를 축소하더라도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인 2.52~3.08% 범위 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 공기업, 지자체 등의 SOC 투자가 현재 보다 부진해지면,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건설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2009~2012년까지 -0.2%p로 건설산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SOC 예산을 향후 4년(2014~2017)간 11조 6,000억원 삭감할 경우 4년 동안 총 15만 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는 SOC 투자를 축소하고 있지만, 주요국들은 노후화된 인프라의 개선, 재해 재난 예방,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SOC에 대한 양적·질적 투자 확대

- 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연관효과에 따른 각 분야의 생산 증대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생산적 복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자립·자활을 통해 탈(脫)복지 추구

- 생산적 복지는 근로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에서 얻어진 사회적 부를 다시 복지와 새로운 노동에 투자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게 됨.
- 생산적 복지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취약 계층의 참여가 용이 하며, 국가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부문의 투자 확대가 필요
-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 경기부양 효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참여 용이,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 공급 등에 있어 타 부문에 비해 우수
- 복지와 SOC는 대척점에 있지 않고 큰 맥락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SOC는 넓은 의미에서 복지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음.

▶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보편적 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삶의 쾌적성 증대를 위한 공원 확충, 상습 정체 도로 구간 해소, 낙후·오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재해·재난 예방, 노후 인프라의 안전도 제고 및 업그레이드 등 필요
- 생활 밀착형 인프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 교통기본권을 통한 '교통 복지'의 확립이 필요하고, 지자체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필요

I. 서론

-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복지 확대 등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11조 6,000억원의 SOC 투자 삭감을 발표¹⁾
- 2014년도 예산 요구 현황 및 예산 편성 방향에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SOC 예산을 금년 24.3조원 대비 약 13% 감축한 21.2조원을 요구한 데 비해 보건·복지·노동은 11.3%, 교육은 17.1% 증가함²⁾.
- 정부는 SOC 투자를 축소하고 복지 투자를 확충할 계획임.
- 그런데 SOC 시설은 공공재로서 이용함에 있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실상 무료인 데 비해 복지는 개별적으로 향유하는 사적재임. 이 때문에 최근 들어 국민들은 인프라보다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음.
- 우리나라에서 SOC는 보수와 성장, 복지는 진보와 분배라는 이미지가 강하여 상호간의 공통 분모가 없는 대립된 개념으로 오인하고 있음.
- 그러나 SOC 투자와 복지는 큰 맥락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함. 따라서 SOC 투자는 넓은 의미에서 복지의 일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우선 국내의 건설 및 SOC 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SOC 투자 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중앙 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 투자 등의 SOC 투자 여력과 주요국의 SOC 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적정 SOC 투자 규모를 검토할 것임.
- 이어서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생산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함. 그리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의 유형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건설산업 차원의 정책 과제를 모색할 것임.

1) 기획재정부·관계부처 합동,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실천 계획(공약가계부)」, 2013. 5. 31.

2)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 요구 현황 및 예산 편성 방향」, 보도자료, 2013. 7. 9.